회요세평

생각에 대한 생각

전재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장

우리 말에 '생각'이라는 단어는 다의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는 존재 근거로서의 사고(思考), "퇴직하고 고향으로 이사 올 생각이다"와 같은 말에서는 미래 계획을, "명절이 다가오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난다"라고 할 때는 회상의 뜻으로, 각기 문맥에 따라 생각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크게 달라진다.

다만 어떤 의미로 쓰였든 간에 생각 뒤에는 크고 작은 행동과 정서의 변화가 뒤따르기에, 생각이 실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바르고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현의 말씀부터 현대의 숱한 자기계발서, 최근 경제학계에서 행동경제학의 부상 등이 모두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현실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구체적인 비율로 나타낼 수는 없더라도 여러 개인들의 생각이 모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제주체 '자기실현적 기대'

일례로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제심리지수(ESI)'의 경우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 등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생각을 지표화한 것이지만, 이후 실제 경제지표가 이 심리지표에 영향을 받아 따라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관찰된다. 작년 상반기중에도 코로나19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면서 경제심리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년 12월, 62.8) 최저 수준(2020년 4월, 63.1)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후 실제 민간소비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생각들의 생각이 모여 실제 경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자기실현적 기대'라 부른다.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계부채 폭증, 생활물가 급등 등 부정적 내용이 매일 지면과 방송을 가득 채운다. 뉴스만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언론의 성격상 만일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혹여 경제주체들의 생각이 일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크다.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건 당연하며 간과해서도 안될 일이지만, 자칫 지나친 경계감이 비관론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자기실현적 기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될 일이다.

그렇다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상회하는 현실, 자영업자의 고충과 눈물, 높은 물가에 줄어드는 장바구니 등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다만, 그렇다고해서 막연한 불안심리에 사로잡히는 자세가 우리 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고무적인 일도 있다. 최근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경제심리지수가 작년과 같이 급락세를 보이지 않고 완만히 하락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긍정성으로 코로나 극복 기대

이는 백신접종 확대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경제주체들이 전염병 전개 양상과 경제상황에 대해 한층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덕분에 민간소비도 작년 1/4분기 급랭했던 모습과는 달리 약간 주춤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당장 눈앞에 산재해 있는 힘든 현실을 모른척할 수야 없겠지만, 냉정한 현실 인식에 더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갖은 역경을 이겨낸 저력을 토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길 기대해본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관에는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IMF 위기에서도 꿋꿋이 떨치고 선진국으로 일어선 저력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기고

청소년범죄 예방 위한 촉법소년 연령 조정 시급

이정서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대 촉법소년의 잔혹하고 흉포화된 범죄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이슈화되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7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개방되면서 처음 답변 요건의 20만명 동의를 얻는 1호 청원이 '촉법소년법 폐지'이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이와 관련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 촉법소년 폐지, 소년법 폐지,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 조정 등이 사회적 관심 속에 정치적 어젠다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촉법소년법은 1953년 제정돼 한 번의 개정도 없이 그간 70년 가까이 지속되어오면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저연령화, 흉포화, 지능화라는 수식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어린 미성년자들이 갖는 당시의 사회적 가치관과 현재의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반사회적·반도덕적 범죄행위는 아직 잘 모르고 어려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흉악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알려진 청소년 범죄는 여중생 폭행 사건, 뺑소니 사망사건, 전철 폭행사건, 초등학생 흉기사용 살인사건, 도박·마약 범죄, 코로나19 발생이후 온라인과 SNS를 통해 괴롭힘 공격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나이로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만 가능하다. 또한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 ⑥항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어 취업 등 장래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전과는 남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영국이나 호주는 만10세, 태국과 인도는 만7세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말하는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인 아웃리치 서비스로 조기에 발굴해 전문가적 도움과 사회적 따뜻한 보살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인성교육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습관, 바른 윤리교육, 올바른 가치관 등 아이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비행 청소년들이 이른바 '촉법소년 찬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하여 청소년 비행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상담·보호·예방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2년 하향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거나 또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전에 계획적인 범법행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체적 사명감과 책임감은 크게 기대할 수 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죄책감은커녕 촉법소년을 방패삼아 죄질이 무거운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시점에서 최초 국민청원이 통과한지 4년이 지난 오늘날 강력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결코 범죄 피해의 고통과 아픔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독자광장

제14호 태풍 '찬투' 대비에 만전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14호 태풍 '찬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으로 이번 주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태풍 예보 시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해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비를 할지 생각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태풍이 상륙하기 전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실외에 있는 입간판 등 물건들을 잘 고정해야 한다.

담장이나 노후화된 건축물이 기울거나 심한 균열로 인해 붕괴할 우려는 없는지, 석축 또는 옹벽의 심한 균열 및 배부름 현상은 없는지, 절개지나 공사장 시설물 붕괴 여부는 없는지 등 생활 주변 위험요인 안전조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태풍이 상륙했을 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면서 대비를 하는 게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강풍에 날릴 수 있는 시설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걸어야 한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반드시 침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해 유사시 대피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선근 보성소방서 소방위

'생명에 희망을' 헌혈 동참해야

대한적십자사가 코로나19 확산세 등의 영향으로 헌혈자가 급감해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혈액원에 따르면 혈액 적정 보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3.5일분 미만 수준으로 혈액 공급에 비상등이 켜진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 등 청소년과 군(軍)에 의존해 오던 헌혈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전과 같지 않다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다며 시행하는 거리두기 강화로 단체헌혈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기 때문에 헌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전에 없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일정 기간 헌혈 금지도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혈액은 부족하다 해서 인공으로 제조할 수 없다. 때문에 헌혈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혈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

혈액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응급환자 수술이 지연되는 등 위급한 사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꺼져가는 생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헌혈 캠페인에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사설

홍준표가 뜨는 이유 폄훼만 할일인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약진하고 있다. 그간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지 않은 홍 후보가 손가락으로 꼽는 후보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의 인기에는 민주당 지지자 또는 호남의 역선택에 힘입었다고 하나 이것만은 이유가 아닌 듯하다.

홍 후보는 매우 현실적인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무안공항을 전국 4대 관문으로 키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천공항과 부산 가덕도, 대구 신공항, 그리고 무안공항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길이 열려야 물류가 빨라지고 그 파급효과로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경제가 활기를 얻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 여권 후보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전략산업 지원 요청에만 화답하는 모양새와는 사뭇 다르다.

홍 후보는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약에서도 로스쿨 폐지와 사법고시 부활, 대학입시 정시 확대와 같은 매우 민감하지만 공정성이 요구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사시 부활과 정시 확대는 입시와 취업에 인생을 걸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이 공약이 적절한가 여부보다는 청소년들의 불만사항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시원함을 주고 있다. 그래서 홍 후보의 발언이 '콜라 화법'이란 말도 나온다.

홍 후보가 야권 후보로 선정돼 나와 준다면 민주당 후보가 쉽게 이길 것으로 확신하며 그의 지지도 상승에 대해 '땡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여권 일각의 인식 일천함이 놀라울 뿐이다. 지역 표심, 민심을 뭘로 보고 이런 망발을 하는가. 유권자들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러니 청년층, 중도층, 호남 표가 흩어지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을 잘 읽어야 한다.

갈팡질팡 재난지원금 이래도 되나

정부와 여당이 악화하는 추석 민심을 고려해 '애매한 경우라면 지원금을 최대한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득 하위 88%에서 90%로의 사실상 기준 완화다. 이렇게 재정을 운용해도 되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간 8만 건이 넘게 접수됐다. 지급 대상에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가족 구성원 계산이 잘못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급 기준이 완화돼도 90.1% 등 지급 경계선에 걸친 이들의 불만은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급 대상이 2% 포인트 늘면 예산은 약 3,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3,000억원의 조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이 여론에 의해 원칙 없이 변하면 정책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국가예산인 지원금 또한 결국 국민 혈세가 아닌가.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되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우대 기준을 적용했다. 재산은 많은 데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상이지만 별다른 자산은 없는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득이나 가구 구성의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해묵은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경계선을 나눔으로써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과 위화감은 수차례 지적해 왔다. 이제부터라도 원칙있는 지급 기준을 정하고 국민 통합, 행정력 등의 부수 요소들까지 꼼꼼히 점검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기를 바란다.

순천시 공무원노조에 고함

기자수첩

권동현
전남취재본부 차장

최근 국민의힘의 한 대선 후보가 "정치공작 한다고 언론과 국민 앞에 호통치는 것은 든든한 검찰조직을 믿고 큰소리치던 검찰총장 할 때 버릇 그대로"라며 같은 당 다른 후보의 기자회견을 지적했다. 순천시에서도 똑같이 호통치는 조직이 있다.

순천시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공무원 위로금 성격의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비'가 공분을 샀다. 코로나19 대처에 고생한 공무원들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1인당 20만 원씩, 총 4억5,400만 원을 지급키로 한 예산편성이 논란이 됐다.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과 허석 순천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한 현금성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순천시 전체가 들끓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순천부시장의 사과와 순천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그라드는 듯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파장이 확산됐다.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도에서 그쳤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터지만, 예산 승인에 반대의견을 낸 시의원을 규탄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까지 굳이 포함시켰다. 예산편성의 정당성보다 시의원과 언론을 성토하는 내용이 강조됐다. '경고한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성명서에서 '공무원노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치공작설을 주장한 것이나 '시의원의 행태를 1,300 조합원과 함께 강력 규탄한다'는 말은 노조 조직 믿고 큰소리치는 오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평소보다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셀프 위로금 책정이나 시의회와 언론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공무원노조이기에 조합원인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공무원은 시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되새기길 바란다.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긴급전화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3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06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산실	(062) 720-1033
사회2부	(062) 720-1043	월간국	(062) 720-10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매국	(062) 720-1004
문화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 TEL (062) 720-1050~53 • 사회부장 010-5601-2219 • FAX (062) 720-1080 •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 TEL (062) 720-1016~17 • FAX (062) 720-1020 •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